

經濟體制와 制度의 選擇과 그 變化에 關한 研究⁽¹⁾

李 之 舜

본 研究의 주요 內容은 다음과 같다. 첫째, 體制나 制度도 경제적 選擇의 對象이 됨을 밝힌다. 즉, 체제나 제도는 단기적으로는 그 안에서 경제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條件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自由, 繁榮, 平等이라는 목표를 더 잘 달성하기 위해 그것들조차도 選擇하고 變化시켜 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둘째, 체제와 제도를 선택하고 변화시켜 나감에 있어 자유, 번영, 평등이라는 목표가 왜 중요한지 또 어떠한 체제나 제도가 그러한 목표 달성에 더 잘 공헌하는지 알아본다. 셋째, 체제와 제도를 선택하고 변화시켜 나가는 메커니즘에는 意圖의 選擇의 메커니즘과 自生的 進化的 메커니즘이 있음을 밝힌 후, 양대 메커니즘의 장단점을 살펴본다. 넷째, 체제나 제도를 선택하고 변화시켜 나가는 두 개의 메커니즘이 실제에서는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보기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財閥改革 작업을 예로 들어 의도적 선택의 메커니즘과 자생적 진화의 메커니즘이 相互補完的으로 작동하는 모습을 살펴본다.

1. 머리말

經濟體制도 選擇의 對象이 되는가? 이 물음에 대해 制度學派나 歷史學派의 전통을 따르는 經濟學者들만 관심을 가질 뿐 소위 主流 經濟學에서는, 經濟體制란 그 안에서 經濟生活을 營爲해야 하는 經濟主體들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經濟與件이므로,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를 취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렇게 된 것은 주류 경제학 이론의 대중을 이루는 新古典學派 경제이론에서 체제나 제도를 선택의 대상으로 삼아 一貫性 있는 理論을 전개하는 예가 극히 드물다는 사실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경제체제 또는 경제제도를 주어진 하나의 여건으로 인식하는 주류 경제학의 이러한 慣行은, 지금 당장 설명하고자 하는 경제현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理論 展開의 便宜性을 위한 것일 뿐, 주류 경제학의 이론체계 자체가 체제나 제도를 선택의 대상으로 포함하지 못할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실제로 경제여건에 관한 주류 경제학의 이론 전개는 다음과 같은 二重性을 지닌다. 즉,

(1) 이 연구는 사단법인 濟原財團의 財政的 支援을 받아 이루어졌다. 당초 제출한 연구계획을 변경하여 필자가 원하는 연구를 하도록 허락해주신 제원재단에 대해 감사드린다.

단기에서는 그것이 興件이 되어 경제주체로서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그 안에서 그가 원하는 바를 가장 잘 달성하게 하는 代案을 선택하지만, 장기에서는 그 여건조차도 자기가 원하는 바를 더 잘 달성하게 하는 방향으로 變化시켜 나간다고 본다. 동일한 맥락에서 주류경제학에서는 체제나 제도를 단기에서는 여건으로 인식하여 그 안에서 경제주체들이 어떻게 경제생활을 영위하는가 이해하려 하지만, 장기에서는 체제나 제도도 선택의 대상으로 인식하여 경제주체들의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로 체제와 제도가 선택 또는 변형된다고 인식함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견지에서 주류 경제학의 가장 중요한 方法論인, 合理的 選擇의 理論 즉 最適化의 理論을 경제체제와 경제제도를 선택하는 문제와 체제와 제도를 변화시키려는 문제에 응용해 보고자 한다. 근래에 주류 경제학에서 체제와 제도의 선택과 변형에 관해 점차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게 된 것은 주류 경제학의 방법론이 달라져서라기보다는 주류 경제학에서 다루고자 하는 경제문제의 범위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영국과 미국 등 서유럽 경제를 대상으로 한 이론 전개에 있어서는 사실 체제 선택의 문제는 경제학자의 큰 관심사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국과 미국 등 서방 선진국이 채택한 資本主義 市場經濟 체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그 체제 안에서 일어나는 경제활동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일에만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다. 간혹 체제에 관해 논의하더라도 그것은 오직 구조론을 중심으로 한 共產主義 (社會主義) 計劃經濟 체제와의 比較分析을 위한 것일 뿐 체제 선택에 관한 고도의 이론을 전개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한 소홀함은 그러나 더 이상 통용될 수 없게 되었다. 그렇게 된 데에는 역설적이지만 1980년대 이후 社會主義 計劃經濟體制의 崩壞와 더불어 세계 도처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가 새로이 자리잡아 가고 있는 일이 크게 공헌하였다. 왜냐하면 그러한 體制 變化는 무엇보다도 체제도 선택의 대상이 됨을 분명히 보여주는 일이었다. 더욱이 과거 20여년에 걸쳐 이루어진 체제 변화는 경제학자들로 하여금 과연 어떠한 체제가 가장 바람직한 체제인가 하는 문제에 다시 한 번 관심을 갖도록 誘導하는 계기가 되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일반화되어 가는 것과 더불어 과연 그것이 최선의 체제인가, 따라서 더 이상 체제 선택의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가, 아니면 그보다 더 나은 체제는 없는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대두된 것이다.

經濟制度 選擇의 문제에 관해서는 체제 선택의 문제와는 달리 주류 경제학에서도 상당히 큰 관심을 보여왔다. 經濟政策에 관한 논의는 사실 대부분 제도 선택에 관한 논의였으며, 通貨制度, 金融制度, 外換制度, 租稅制度, 規制制度 등에 관한 논의는 제도 선택의

문제를 명시적으로 다룬 경우가 된다. 따라서 제도 선택에 관한 논의는 새삼스러울 게 별로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이루어진 제도 선택의 문제 역시 체제와 제도 선택에 관한 이론체계 내에서 일관성 있게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정책이나 제도를 명시적인 선택의 대상으로 인식해 논의를 전개한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체제와 제도의 선택과 변화에 관해 이 연구는 신고전학파의 의도적 선택의 이론에 못지 않게 하이에크를 중심으로 해. 발전되어온 自生的 進化的 過程을 중시하는 進化論的 체제 선택 및 체제변화의 이론에 대해서도 주목한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경제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자생적 진화의 메커니즘이 체제와 제도를 선택하고 변화시켜는 과정에서 실제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데 관심을 갖는다. 이런 견지에서 본 연구는 자생적 진화의 메커니즘에 대해 그 내용과 특징 및 장단점을 신고전학파의 의도적 선택의 메커니즘과 대비하여 설명한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構成된다. 이 머리말에 이은 제2장에서는 選擇의 對象이 되는 경제체제와 경제제도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인류가 체제와 제도의 선택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目標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 自由, 繁榮, 平等이라는 세 가지 목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해한다. 제4장에서는 체제와 제도의 선택에 관한 이론을 검토하게 되는데 다양한 선택이론 중 意圖的 選擇의 과정을 중시하는 신고전학파의 合理的 選擇의 이론과 自生的 進化的 過程을 중시하는 하이에크의 進化論的 選擇의 이론을 비교·검토한다. 제5장에서는 체제 또는 제도 선택에 관해 연구자가 정리한 이론적 논의가 실제에서는 어떻게 응용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현재 우리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財閥體制 改革 작업에 있어서 의도적 선택의 메커니즘 및 자생적 진화의 메커니즘이 각기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이해해 본다. 끝으로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체제와 제도 선택에 있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敎訓이 무엇인가 알아봄으로써 글을 맺는다.

2. 經濟體制와 經濟制度

2.1. 經濟體制

한 나라 경제에 관해 누가 그 경제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경제주체가 되는가(構成員의 資格), 각 경제주체는 어떠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가(構成員의 權利와 義務), 각 경제주체는 어떠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으며 또 어떠한 경제적 활동을 해서는 안 되는가(許容事項

과 禁止事項), 각 경제주체가 행한 경제활동의 결과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조정할 것인가(調停 메커니즘), 경제활동의 결과를 어떻게 나누어 가질 것인가(果實 配分 方式)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規範의 集合을 경제체제로 정의할 수 있다. 나라 경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수천만의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하나의 거대한 競技로 이해할 때, 그 경기의 기본적인 性格은 무엇이며, 경기의 進行方式은 무엇인지, 경기자가 지닌 權利는 무엇이며, 경기자가 준수해야 할 規則은 무엇이고, 경기자를 監視하고 경기내용의 잘잘못을 判定할 권한은 누구에게 있으며, 경기자에게 주어지는 賞罰은 무엇인가 등에 관해 규정하는 競技의 가장 基本的인 構造에 해당하는 것이 경제체제인 것이다.

경제체제의 성격을 규정하는 요소 중 경제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는 무엇이며, 구성원이 할 수 있는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이고, 구성원간의 이해가 상충할 때 이를 조정하는 메커니즘은 무엇인가 그리고 경제활동의 결과를 구성원간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체제간의 차이를 낳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반면 누가 그 경제의 구성원이 되는가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경제체제별로 그 해답에 있어 대동소이하다. 현존하는 거의 모든 경제체제가 그 나라의 국민들로 이루어진 가계, 그 나라의 국민이 주인인 기업, 그 나라 사람들로 이루어진 정부를 당연직 구성원으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다만 외국인과 외국 기업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경제체제별로 상이한 태도를 보인다.

경제체제에 관해 논의함에 있어 體制의 類型으로 드는 가장 전형적인 예는 資本主義 市場經濟體制, 社會主義 計劃經濟體制 및 混合經濟體制이다. 여기에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대비되는 것은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 및 구성원이 할 수 있는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에 관해, 자본주의에서는 個人의 自由와 私有財產權을 보장하여 다른 구성원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 한 본인의 재산을 본인의 의사에 따라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허용함에 반해, 사회주의에서는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 않고 개인의 자유보다는 社會 全體의 이익을 앞세워 개인이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극도로 제한한다는 점에서 상이하기 때문이다. 반면 시장경제와 계획경제가 대비되는 것은 경제활동의 결과를 어떻게 調停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경제활동의 결과를 어떻게 配分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해 상이한 답을 주기 때문인데, 전자는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활발한 競爭을 통해 개개인의 利害關係가 조정되는 自律調停 메커니즘을 중시하고 그러한 자율조정 메커니즘이 원활하게 작동해 결정하는 과실의 배분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데 반해 후자는 개개 경제주체가 어떤 경제활동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부터 시작하여 과실을 어떻게 나누어 가질 것인가 하는 배분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경제활동의 전과정을 당국의 計劃에 따라 행하도록 되어 있어 개개

인의 이해관계가 계획 또는 계획당국에 의해 조정되는 強制調停 메커니즘을 중시한다. 아울러 경기자를 감독하고 필요에 따라 상벌을 가하는 역할에 관해서는, 시장경제에서는 시장이 지닌 감독 기능 및 상벌 부여 기능을 중시함에 반해 계획경제에서는 계획 또는 계획당국이 지닌 감독 기능 및 상벌 부여 기능을 중시한다.

물론 실제로 존재하는 경제체제를 순수한 자본주의 시장경제 및 순수한 사회주의 계획경제로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나라에서도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며 사회주의 계획경제라고 해도 사유재산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모든 것을 계획에 의거해 처리하는 나라는 많지 않다. 따라서 현존하는 대부분의 경제체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특성들을 섞어 놓은 혼합형이라고 볼 수 있다.

2.2. 經濟制度

나라 경제에 관해 구성원의 자격,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 구성원의 행동에 대한 허용사항 및 금지사항, 구성원간의 이해관계 조정, 구성원에 대한 상벌 집행 방식 등 경제의 기본구조를 규정하는 것이 경제체제라면, 어떤 경제체제 내에서 그 구성원들이 실제로 經濟活動을 營爲함에 있어 活用하는 裝置들과 구성원들의 경제활동을 獎勵, 抑制, 監視 및 調停하는 具體的인 手段으로서의 裝置들을 가리켜 경제제도라고 부른다.

구성원들이 경제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活用하는 장치로서는 市場制度나 貨幣制度 및 金融決濟制度가 있으며, 구성원들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거나 억제하는 장치로서는 租稅制度나 規制制度가 있고, 구성원들의 경제활동을 감시하는 제도로서는 金融監督制度나 企業監視制度가 있으며, 구성원들이 행하는 경제활동을 상호 조정하는 장치로서는 市場制度나 規制制度가 있다. 경제제도에는 이러한 有形의 장치들뿐 아니라 法律이나 慣行과 같은 無形의 장치들도 있다. 무형의 장치로서 중요한 것으로 구성원의 基本 權利와 義務 그리고 財產權에 관한 規定을 담은 憲法과 모든 經濟行爲의 正當을 가리는 基本 規範인 商法을 들 수 있다.

경제제도를 분류하는 또 하나의 기준은 그것을 경제 게임의 기본규칙을 집행에 옮기는 일과 관련된 제도, 시장 및 시장 관련 제도, 정부의 경제정책 수행과 관련된 제도로 나누는 것이다. 게임의 기본규칙을 집행에 옮기는 일과 관련된 제도로서는 헌법, 상법, 공정거래법 등 法律制度와 規制·監督·監視制度가 있으며, 시장과 시장 관련 제도로서는 각종 형태의 市場, 貨幣制度, 金融決濟制度가 있고, 정책 집행과 관련된 제도로서는 規制制度, 監督制度, 租稅制度 등이 있다.

이렇게 이해할 때 經濟制度란 한 경제체제가 지향하는 바를 실천에 옮김에 있어 구성원

들이 그것들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그것들을 이용해 구성원들의 활동을 제어하는 장치로서 경제의 上部構造를 지칭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經濟體制란 제도와 구성원간의 관계, 구성원과 구성원간의 관계, 제도와 제도간의 관계 등을 규정하는 기본 규범을 지칭하는 것으로서의 경제의 下部構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체제는 原則에 관한 것이며 제도는 원칙을 실현에 옮기는 데 필요한 裝置에 관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체제와 제도에 관심을 갖는 까닭은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체제와 제도가 한 경제의 구성원들이 원하는 바를 달성해 나감에 있어 與件이 됨과 동시에 手段이 되기 때문이며, 아울러 그것이 구성원들이 원하는 바를 얼마나 잘 달성할 수 있는가 하는 結果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체제와 제도가 여건이 됨과 동시에 수단이 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체제와 제도가 여건이 된다 함은 경제주체들이 적어도 단기에서는 체제나 제도를 주어진 것으로 보고 체제나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또는 허용할 것으로 기대하는 범위 내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단기에 있어서는 체제나 제도를 변화시킬 수 없으므로 그것들이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행동공간 안에서만 경제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반면 체제나 제도가 수단이 된다는 것은, 단기에서는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체제나 제도조차도 장기에 있어서는 경제주체들이 원하는 바를 더 잘 달성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선택의 대상이 됨을 의미한다. 물론 체제와 제도를 선택함에 있어 제도의 선택은 비교적 자주 이루어지나 체제의 선택은 아주 드물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양자간에 차이가 있다.

3. 體制나 制度의 選擇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

경제주체들이 체제나 제도의 선택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目標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답으로 아마도 自由와 繁榮과 平等이라는 가치 목표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본 種으로서의 人類의 生存이나 宗教적인 관점에서 본 사랑이나 救援의 實現을 보다 더 높은 차원의 목표로 설정할 수도 있으나 자유와 번영과 평등의 실현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중심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생산적인 논의 전개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3.1. 自由

여기에서 말하는 自由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他人에게 弊害를 주지 않는 한에서, 또한 타인에게도 自己와 同一한 權利와 義務를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이것은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貧困으로부터의 자유, 信仰의 자유 및 表現의 자유로 요약한 4대 자유의 개념보다 더 포괄적인 것이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데에서 전반부를 강조할 때 신앙 선택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자기가 원하는 것의 일부가 되며, 후반부를 강조할 때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의 일부가 된다. 한편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 할 때 구체적으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物質的, 肉體的, 精神的, 知的 財産인데 이러한 재산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원하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물질적, 육체적, 정신적 또는 지적으로 너무나 빈곤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며 그것을 안다 하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면 온전한 자유인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위에서 이 점을 강조하는 것이 빈곤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할 수 있다.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한 자기가 지닌 수단을 사용해서 그가 원하는 바대로 선택하는 것을 자유라 할 때 여기에서 우리가 특히 관심을 갖는 것은 經濟的 領域에서의 自由이다. 경제적 자유란 인간의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각 개별경제주체가 다른 경제주체에 게 부당한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누구의 干涉도 받지 않고 그가 원하는 바를 生産하고 交換하고 消費하고 貯蓄하고 投資하는 일체의 경제활동을 본인의 自發的인 意思에 따라 행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경제적 자유는 어떻게 보장되는가? 그것은 우선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준수해야 할 기본법에 의해 개개인의 人格的 自由를 天賦的인 權利의 하나로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개개인의 인격적 자유를 천부적인 권리의 하나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그 자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토대가 없다면 이는 무의미한 자유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서 개인이 자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 私有財産權이다. 사유재산권이란, 각 개개인이 지닌 육체적, 정신적, 지적 능력이 온전히 그 사람의 것임을 인정함과 동시에 그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았거나 그 스스로의 노력으로 형성한 부가 온전히 그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일은 개개인의 자유를 보장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先決要件이 된다. 사유재산권이 의미를 가지려면 그것이 단지 所有에 관한 權利를 보장할 뿐 아니라 그 使用權 및 處分權 역시 소유자에게 歸屬됨을 보장해야 한다. 사용권 및 처분권이 소유자에게 귀속된다함은 개개인이 소유한 각종 재산을 그 어느 누구의 간섭도 받음이 없이 소유자의 자유 의사에 따라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음을 뜻한다.

개개인이 자유권을 행사하려 할 때 그것이 타인의 자유권과 競合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개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되는가? 이 경우에는 경합하는 당사자들이 어느 누구의 간섭이나 강요를 받음이 없이 온전히 자기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동의한 방법에 의해 일을 처리하는 것이 자유로운 행동이 된다. 즉,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자발적인 참여와 자발적인 동의에 의해 일을 처리하고 그 결과에 承服하는 것이 자유권을 행사하는 것이 된다. 이를 경제적인 의미로 재해석하자면, 타인과의 거래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자기 계산하에 자기 뜻을 따라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해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는 자유로 이해할 수 있다.

3.2. 繁榮

체제와 제도를 이용하여 인류가 이루고자 하는 바를 논의하면서 우리가 개개인의 자유를 가장 먼저 드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自由意志를 지닌 각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人間 尊嚴性 維持에 있어 必要條件이라는 인식에 근거한 것이며 또한 자유권이 보장될 때 인류가 가장 나은 狀態로 나갈 수 있다는 믿음에 근거한 것이다. 여기에서 인류가 가장 나은 상태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사실 매우 論難의 여지가 많은 개념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이 가장 나은 상태인지 先驗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가 마음속으로 어떤 상태가 바람직한 것인지 그릴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과연 最善의 상태인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보장할 때 인류가 가장 나은 상태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이건 인류가 자유로이 선택한 것의 결과라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인식과 무엇이 가장 나은 상태인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가 그 어떤 다른 방식에 의한 선택의 결과보다는 나은 상태일 것이라는 믿음에 근거한 것이다.

인류에게 가장 나은 상태가 무엇인지 선형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인류가 자유권을 행사함에 있어 그 한 바탕을 제공하는 물질적 재산이 갖는 역할을 무시할 수는 없다. 위에서 우리가 貧困으로부터의 自由(解放)를 강조한 것은 바로 그런 연유에서인데 물질적인 바탕이 취약하여 생존하기 위해서 남에게 隸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에게 주어진 자유가 별 의미를 지니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누구에게나 生存을 위한 最小限의 物質的인 基盤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인류는 이러한 최소한의 것에 안주하려 하지 않는 속성을 지닌다. 극히 소수를 제외한 대다수의 인류는 가능하면 더 많이 더 다양하게 갖고 쓰려 한다. 이렇게 인간의 욕망이 무한히 크고 無限히 多樣함을 인정해야 한다면 그렇게 무한하게 크고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인 物質的인 豊饒의 확보가 체제와 제도를 이용해 인류가 이루고자 하는 중요한 목표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체제와 제도를 이용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하나로 번영을 중시하는 이유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번영이 가장 잘 달성될 수 있는가? 한 경제의 번영은 그 경제를 구성하는 각 경제주체가 홀로 또는 다른 경제주체와 힘을 합하여 각자가 지닌 능력을最大限度로 蓄積해 나갈 수 있으며 동시에 매 시점 그들이 지닌 능력을最大限度로 發揮할 수 있을 때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관점에 대해 반대하는 주장도 있다. 이 주장에 의하면 개개인보다는 社會 全體의 意志가 중요하며 개개인보다는 사회 전체가 판단하는 것이 더 옳으므로 사회 전체의 판단에 따라 경제활동을 組織하고 運營하는 것이 인류에게 가장 큰 번영을 가져다주는 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왜 사회 전체의 의지가 개인의 의지보다 중요한지, 어떻게 해서 개개인의 판단보다 사회 전체의 판단이 더 옳은지를 밝히지 않는 한 空虛한 주장에 불과하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해 만족할만한 답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사회 전체의 의지와 사회 전체의 판단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명확히 제시할 수 없다면 그 역시 空念佛이 된다. 사회 전체의 의지와 판단이라는 것이 오직 소수의 현명하거나 힘센 사람들의 의지와 판단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불순한 동기를 지닌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려는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

각 경제주체가 홀로 또는 다른 경제주체와 힘을 합해 각자가 지닌 능력을 최대한도로 축적함과 동시에 매 시점 그들이 지닌 능력을 최대한도로 발휘할 수 있을 때 번영이 달성된다 함은 개개인 또는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구성된 집단이 사전적으로 어떠한 것이 최선의 상태인지를 명확히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지적 능력이 유한함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그 누구도 최종 종착지가 무엇인지는 확실하게 모르지만 개개인에게 자유를 보장해 주어 각자가 자유 의사에 따라 각자의 판단 아래 각자의 책임으로 자유로운 행동을 하도록 허용하면 그 결과가 무엇이건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인류가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상태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또한 만의 하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취한 행동의 결과가 나쁜 것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된 것은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치른 대가이므로 좋지 않은 결과라도 기꺼이 받아들여야겠다는 신념이 바탕에 깔려 있다.

3.3. 平等

체제와 제도를 활용하여 인류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로서 자유와 번영 못지 않게 중요시되는 것이 평등이라는 價値概念이다.

평등은 劃一이 아니다. 획일은 모든 경제주체가 모든 면에서 동일함 또는 동일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個性과 個人差를 容認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들은 타고난 능력과 選好가 다양하여 같지 않을 뿐 아니라 性別과 年齡과 成長 環境과 教育과 訓練에

따라 後天的으로 形成하는 능력과 선호도 다양하다. 즉, 사람들이란 본질적으로 모든 면에서 동일할 수는 없는 존재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획일화시키려는 시도는 인간의 本性에 어긋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사람들이 選好, 能力, 資質 등에서 획일적으로 같을 수는 없지만 나의 자유에 못지 않게 남의 자유도 소중하며, 나의 번영이 중요한 만큼 남의 번영도 중요하고, 나의 권리와 의무가 중요하다면 남의 권리와 의무도 똑같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는 모든 사람이 같다. 아마도 평등은 이러한 점을 강조하는 것이리라.

평등을 事前的 平等과 事後的 平等으로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다. 사전적 평등은 생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모든 인류는 性, 種族 및 기타 出生 環境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法 앞에서 同等한 待遇를 받아야 함을 뜻한다. 즉, 한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성원이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져야 함을 의미한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성은 남성과 동일한 권리를 가질 수 없으며 피부색에 따라 권리와 의무의 크기가 달라야 한다는 생각이 많은 나라에서 통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은 없으며 누구나 다 법 앞에 평등하다는 생각이 일반화되어 있다.

사전적 평등이 이와 같이 機會의 平等을 의미하는 뜻으로 쓰일 때는 논란의 여지가 적다. 기회의 평등이란, 그것을 이용하건 안 하건 그것은 각자의 자유에 따라 판단할 일이지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야 함을 뜻한다. 이것은 게임에 참여하는 모든 경기자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지닌 상태에서 게임에 임하도록 함을 의미한다.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고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자는 주장에 대해 반대할 사람은 없다. 남이 내게 해주길 바라는 바대로 내가 남에게 해주어야 한다는 黃金律을 따른다면 이와 같은 의미의 평등을 부정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렇기에 기회의 평등에 관해서 사람들의 동의를 구하기는 비교적 쉽다.

그러나 사전적 평등이 경기 참여자를 모든 측면에서 均等하게 만들어 놓고 게임에 임하도록 하자는 뜻으로 이해되면 논란의 여지가 많이 생긴다. 왜냐하면 다양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들을 재단하여 똑같이 만든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 뿐더러 억지로 그렇게 하려고 시도한다면 그것이 개개인의 자유와 권한을 중대하게 침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事後的 平等이란 경제활동의 結果를 모든 구성원이 똑같이 나누어 갖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게임에 참여하는 경기자의 능력에 따라 각자가 거둔 성과가 다른 경우에도 많이 거둔 자에게서 적게 거둔 자에게로 과실을 移轉시킴으로써 모든 경기 참여자가 같은 크기의 과실을 갖도록 하는 것에 해당한다. 만인은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해야 하는데 각자가 소유하여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의 크기가 다르다면 각자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진정한 평등을 이룩하려면 개별 행동의 결과를 구성원 모두가 똑같이 나누어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완전한 사후적 평등에 대해 동의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가 노력하여 얻은 결과를 자기 마음대로 쓰려는 人間 本性에 背馳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동시에 어느 정도까지는 사후적 평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도 하다. 즉, 절대적인 의미의 사후적 평등을 추구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정한 정도 사후적 평등의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지닌 사람이 많다.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사후적 평등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첫째, 육체적, 정신적, 지적 능력이 결핍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조건하에서 경기에 임할 때 그들이 게임에서 지는 것이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것을 순전히 그들의 탓으로 돌려 모른 체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있다. 그들에게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물질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둘째, 육체적, 정신적, 지적 능력에 큰 결함이 없으며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이 나빠 나쁜 결과를 거둔 사람들에게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물질 토대는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물론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그것이 진정 불운에 의한 것이라면 일시적인 것이므로 타인의 수확을 나누어 갖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것이 아니라 본인의 저축이나 차입을 활용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된다.

셋째, 각자가 최선을 다 했다 하더라도 각자가 지닌 능력의 차이나 운의 차이로 인해 다른 결과를 얻기 마련인데 이 때 많이 거둔 자와 적게 거둔 자 사이에 그 결과의 차이가 너무 크면 위화감이 생겨 조직 자체의 존립이 위태롭게 될 수도 있으므로 그 차이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있다. 이것은 시샘을 정당화하는 주장으로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주장에 대해 반대한다.

넷째, 게임에 임하는 경기자들이 지닌 물질, 육체적, 정신적, 지적 능력에서 경기자마다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 자체를 부당한 일로 여기는 견해가 있다. 태초에 사람들은 누구나 동일한 상태로 태어났으나 아직 범치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여서 약육강식이 행해졌으며 그 결과로 생긴 빈자와 부자의 차이가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고착되어 나타난 것이 현재 우리가 관찰하는 빈부 차이이며 빈부 차이가 육체적, 정신적, 지적 능력의 차이를 가져오므로 초기 조건이 다르다는 사실을 정당한 것으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만일 이 주장이 옳다면 게임에 임하는 경기자의 물적, 육체적, 정신적, 지적 능력의 차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결과의 차이도 정당하지 않다는 주장이 성립된다. 이와 같이 결과의 차이를 정당화시킬 수 없다면 결과를 재배분함으로써 게임에 참여한 모든 경기자가 과실을 똑같이 나누어 갖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사후적 평등을 강조하는 위의 네 가지 주장 가운데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은 첫째와 넷째이다. 타고난 신체적, 정신적 결함 또는 후천적인 불운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결함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과 같은 조건하에서 경쟁한다면 결함을 지닌 사람이 이기기 어려우므로 경쟁에서 성공한 사람이 거둔 과실을 결함 때문에 경쟁에서 실패한 사람에게 나누어주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다. 아마도 그것은 同情心의 발로이거나 사전적인 확률로 보아 누구나 그런 지경에 이를 가능성이 있으므로 내가 그런 처지에 이르렀을 때 남들도 나를 도와주기 바라는 심정을 감안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때에도 程度의 문제가 따른다. 얼마나 나누어주는 것이 옳은가 하는 문제가 그것이다. 이 문제에 관한 정답은 없다. 어떤 사회는 그것을 순전히 개인의 동정심이나 가족간의 사랑에 호소함으로써 해결하려 하고 또 다른 사회는 세금을 거두어 나누어주는 것으로 해결하려 한다. 이 후자의 경우에는 租稅抵抗點이 그 사회가 감당하기를 원하는 최고의 재분배 수준이 된다. 이 문제에 관한 또 다른 접근으로, 신체적, 정신적 결함이 있는 사람에게 게임이 끝난 후 과실을 나누어주는 것보다는 게임 시작 전에 그들의 缺陷을 補完해주는 조치를 취하는 게 낫다는 주장이 있다.

타고난 능력의 차이로부터 연유하는 결과의 차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여기에서 타고난 능력이란 게임을 시작할 당시 즉 경제활동을 시작할 당시의 능력을 말한다. 경제활동을 시작할 당시의 능력은 천부적으로 타고난 육체적, 정신적, 지적 능력과 출생 후 경제활동을 시작하기까지 부모와 사회로부터 받은 물적, 육체적, 정신적, 지적 유산과 교육, 훈련, 수련 등 본인의 노력을 통해 축적한 능력의 합으로 정해진다. 이 가운데 부모나 사회로부터 받았거나 본인이 천부적으로 갖고 태어난 능력의 차이에 관해서는 못난 사람이 그렇게 된 것이 본인의 탓이 아니듯이 잘난 사람이 그렇게 된 것도 본인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므로 그로 말미암아 초래되는 결과의 차이는 정당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견해가 있다.

본인의 노력과는 무관하게 정해진 사전적 능력의 차에서 기인하는 결과의 차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그에 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두 가지 해결책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하나는 위에서 경기자들의 물적, 육체적, 정신적, 지적 능력을 균일화시킨 후 경기를 시작하는 의미의 평등에 관해 소개한 바 있는데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의 사전적 평등을 구현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경제활동을 개시하는 모든 사람이 물질, 육체적, 정신적, 지적으로 동일한 조건을 갖추도록 능력을 균등하게 재분배하여 평균인을 만들어놓고 게임을 시작하자는 주장이다. 또 다른 해결책은 사전적인 능력의 차이를 인정하여 능력에 따라 경제활동에 종사하도록 허용하되 각자가 얻은 서로 다른 종류와 크기의 과실을 사후적으로 모든 사람이 균등하게 나누어 갖는 것이다.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능력을 사전적으로 균등화시키자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 주장이다. 개성과 선호도와 능력과 자란 환경이 천차만별인 사람들을 균등한 상태로 만들어 놓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후적 결과의 차이를 없애자는 주장은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실현 가능하다. 예를 들어 경제활동의 결과물을 적절히 평가한 후 그 가치의 총합에 대해 모든 경제주체가 균등한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게 한 가지 방법이다. 가령 GDP에 대해 경제주체의 수만큼 주권을 발행하여 그것을 각자에게 하나씩 나누어준다면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사후적인 균등배분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사후적으로 결과를 재분배하여 모든 사람이 똑같이 나누어 갖자는 주장에 관해서는 그렇게 하려면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실현가능성은 있으나 그렇게 할 때 경제주체들의 動機喪失로 인한 부작용이 너무나 크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극히 예외적인 소수를 제외하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노력해 얻은 것을 자기가 향유할 수 있을 때 가장 창의적으로 그리고 가장 열심히 경제활동에 임한다. 그렇기에 자기가 노력해 얻은 것을 본인의 뜻에 반해 남에게 나누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면 창의성을 발휘하여 열심히 일할 의욕을 잃기 쉽다. 물론 사람들 중에는 자기가 땀흘려 일해 거둔 것을 누가 와서 강제로 빼앗아 가더라도 일하는 게 즐거워 열심히 일할 사람들도 있고 또 남에게 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좋아 열심히 일할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예외일 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일해 얻은 것을 남에게 나누어주어야 한다면 그것을 전부 자기가 가질 때에 비해 경제활동의 강도를 낮추는 게 보통이다.

자기가 노력해 얻은 것을 남과 나눌 수밖에 없을 때는 과실을 본인이 독차지할 때에 비해 경제활동의 강도를 낮추는 게 보통 사람의 본성이지만 경제활동의 강도를 낮추는 정도는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 달라진다. 여기에서 사람들의 성향이 중요한 것은 사람마다 남에 대해 배려하는 마음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성향을 극단적으로 이기적인 데에서 극단적으로 이타적인 데에 이르기까지 일직선상에 분포도로 나타낸다면 좌우대칭이 아닌 이기적인 쪽으로 상당히 기운 분포도를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은 보통 사람이라면 이기적인 심리가 이타적인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작용하지만 이기심에 못지 않게 이타심도 강한 사람들도 있음을 의미한다. 이 분포에서 이기심이 강한 쪽에 위치

한 사람일수록 자기가 노력해 얻은 것을 남에게 나누어줄 수밖에 없는 경우에 경제활동의 강도를 떨어뜨리는 정도가 클 것이다.

자기가 노력해 얻은 것을 남과 나눌 수밖에 없을 때 경제활동의 강도를 낮추는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요인은 얼마나 많이 나누어주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나누어주어야 하는 정도가 증가할수록 경제활동의 강도를 낮추는 정도가 증가한다. 예를 들어 자기가 노력해 얻은 것의 10%를 남에게 주어야 할 때, 50%를 남에게 주어야 할 때, 또는 90%를 남에게 주어야 할 때 그가 경험하는 의욕상실의 크기는 더 많이 빼앗기면 빼앗길수록 커질 것이다. 예전부터 십일조가 통용된 것이라든지 십시일반이라는 말이 널리 쓰인 것을 보면 10% 정도 나누어주는 것에 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참을 만하다는 생각을 하는 게 보통이었던 모양이다. 그러나 나누어 가져야 하는 비율이 50%를 넘게 되면 그것은 내가 일해 얻은 것을 나보다 남이 더 많이 갖게 됨을 의미하므로 거기에 기꺼이 동의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자기가 노력해 얻은 것을 남과 나눌 수밖에 없을 때 경제활동의 강도를 낮추는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요인은 고려의 대상이 되는 '남'이 자기와 얼마나 '멀리' 있는가 하는 점이다. 예를 들어 보통 사람에게 있어서는 부부, 자녀, 부모, 형제, 가까운 친척, 먼 친척, 직장동료, 동향인, 동창, 동족 등의 순서로 갈수록 기꺼이 나누려는 정도가 약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인과 타인과의 거리감에 따라 거리감이 적을수록 더 많은 것을 기꺼이 나누어 주려 하게 되는 것이다. 위에서 든 예 중에서 부부간의 감정, 부모의 자식에 대한 감정, 자식의 부모에 대한 감정 등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나와 남을 구대여 구분하지 않으려는 경우에 해당한다. 물론 사이가 원만한 동안에는 일심동체라 하여 나와 남을 구분하지 않던 부부도 사이가 나빠지면 남만 못한 관계로 변질될 수도 있다. 부모의 자식에 대한 감정도 경우에 따라 애증이 교차하기도 하지만 대개의 부모는 자식을 확장된 또 하나의 자기로 인식하여 그가 가진 것을 자식에게 다 주려는 경향이 존재한다. 그러나 내리 사랑이라는 말이 있듯이 자식의 부모에 대한 감정은 부모의 자식에 대한 감정만큼 크지는 않다. 한편 형제나 친척에 이르면 감정의 밀도가 매우 얽어져 때에 따라서는 생판 모르는 남은 도와주면서 형제나 친척은 모르는 체 하는 경우도 있다.

3.4. 自由와 平等의 調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누구나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는다든 전제 하에서 경제 구성원 각자가 자기가 원하는 바를 자기 뜻에 따라 자유로이 행할 수 있는 自由主義 經濟體制가 바람직한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原則의 문제로서, 그것이 개인의 자유를 가장 잘 보호해주는 장치이기 때문이다. 개인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를 가장 잘 보호하는 장치인 自由經濟體制를 선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둘째는 實際的인 문제로서, 그것이 구성원 각자의 經濟的 福祉를 증진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장치라는 인식 때문이다. 자유경제체제가 번영을 가져오는 가장 효과적인 장치가 된다는 인식은 단지 선택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것은 이미 수많은 예에 의해 입증된 바 있다.

자유주의 경제체제는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종종 비판의 대상이 된다. 자유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가장 강력한 비판은 그것이 平等이라는 價値에 奉仕하는 데에는 아주 취약하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유를 중시하는 만큼 평등도 중시한다. 그러므로 만일 자유경제체제가 평등이라는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 부족한 게 사실이라면 무조건 자유경제체제를 옹호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자유경제체제가 평등이라는 가치에 봉사하는 데 부족하다는 이러한 비판은 많은 경우 정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자유경제체제에서도 평등을 중요한 가치개념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경제체제는 무엇보다도 모든 구성원에게 公平한 機會를 보장해 주는 것을 전제로 한다. 즉, 자유경제체제는 기회의 평등이라는 면에서의 사전적 평등을 중시한다.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지니며 그들 누구에게나 동일한 경기 규칙이 적용된다는 의미에서의 기회의 평등을 자유경제체제는 당연한 선결조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나 자유경제체제는 無條件的인 結果의 平等에 대해서는 反對한다. 즉, 경기자가 자기의 노력에 의해 얻은 결과를 그의 동의 없이 남과 똑같이 나누어 갖는 것에 대해 자유경제체제는 반대한다. 아마도 이 점이 자유경제체제가 평등이라는 가치에 봉사함에 있어 부족하다는 평을 듣는 까닭인 듯 싶다. 자유경제체제가 무조건적인 결과의 평등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조건적인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일이 자기 것을 중시하는 인간의 본성에는 맞지 않는 일이어서, 무조건적인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게 되면 개성과 창의성과 근면성이 살아나지 않게 되어 인류가 발전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커녕 자칫하면 퇴보하여 뒤로 물러서게 될지도 모른다는 인식 때문이다.

그렇다면 制限的인 結果의 平等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제한적인 결과의 평등이란 자유경쟁의 결과물을 어느 정도까지는 서로 나누어 갖는 것을 말한다. 자유경제체제는 제한적인 결과의 평등을 지지한다. 육체적, 정신적,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 정상인과 동일한 조건 아래서 경쟁한다면 장애자가 정상인에 비해 더 빈약한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초기조건 劣惡性에 기인한 이러한 불평등에 관해서는 누구나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데 쉽게 동의할 것이다. 따라서 육체적, 정신적,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상인이 거둔 과실을 나누어주어야 한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느 정도 나누어주는 것이 좋은가 하는 점이다. 이 문제는 선형적으로 결정할 성질이 아니다. 그것은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타구성원에 대해 갖는 동정심의 크기에 따라 달리 정해될 것이다. 아마도 실제에 있어서는 장애인들에게 보다 많은 과실이 돌아가게 하려는 힘과 자기가 번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힘이 균형을 이루는 수준에서 나누는 비율이 정해될 것이다. 이 경우에도 나누는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불리한 위치에 있는 동포를 도와줄 수 있어 기쁘다는 감정보다는 자기가 일해 얻은 것을 빼앗기게 되어 억울하다는 감정이 더 커질 것이다. 만일 어떤 사회가 그런 수준을 넘어서까지 결과물을 재분배하고자 한다면 정상인들의 경제활동 의욕이 손상되어 나누어 가질 결과물의 크기가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物質의 能力의 不平等이 낳는 結果의 차이에 關해서는 어떻게 對 처해야 할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을 시작할 당시에 물질적 불평등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작업을 선행하여야 한다. 경제활동을 시작할 당시에 물질적 불평등이 존재하는 이유는 父母로부터 물려받은 또는 물려받게 될 財産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주는 재산의 크기가 다른 것이 과연 얼마나 정당한 것인가에 달려 있다. 개인의 자유와 사유재산권을 존중하는 입장에서는, 부모가 노력하여 얻은 물질적 재산을 부모가 원하여 그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은 자기가 번 것을 자기 뜻대로 처분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주는 재산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본다. 또한 부모가 그 자식을 아끼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므로 이를 억제하는 것은 자연의 섭리에도 어긋난다고 본다. 만일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주는 재산의 크기를 제한하거나 금지한다면 부모가 열심히 일할 의욕을 상실하게 되어 그 경제 전체가 생산하는 과실의 양이 적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동태적인 효율성의 관점에서 볼 때에도 부모가 그 재산을 어떻게 처분하건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런 주장을 펴는 사람의 입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자식이 본인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부모를 골라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므로 富者 집에 태어나건 가난한 집에 태어나건 그것은 순전히 운인 데 運으로 정해진 물질적인 능력의 차이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 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또는 앞으로 물려받게 될 재산의 크기가 다른 상태에서 경쟁에 임하게 되면 부유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집에 태어난 사람은 더 가난해질 가능성이 있어 貧富 隔差가 확대될 것이므로 경제활동을 시작할 당시의 물질적 능력의 차이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어떤 주장이 옳은가? 이것은 어떤 주장이 전적으로 옳은가 그른가의 문제가 아니며 결국 국은 구성원이 누리는 자유와 평등간의 선택의 문제이다. 인류가 실제로 운영하는 제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유재산권을 100% 인정하여 자기가 번 것을 자기 마음대로 소유하고 처분하도록 용인하는 경제는 없으며 사유재산권을 전면 부정하여 부모세대의 재산을 몰수하여 자식세대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주는 경제도 없다. 실제로 발견되는 것은 相續稅 制度를 활용하여 부모의 재산이 전액 그 지식에게로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는 절충형 해법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상속세율을 얼마로 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경제마다 차이를 보인다. 상속세율을 높이 잡을수록 평등이라는 목표 달성에는 도움이 되나 자유와 번영의 희생이 따르고, 상속세율을 낮게 잡을수록 자유와 번영이라는 목표 달성에는 도움이 되나 평등이라는 목표는 희생될 가능성이 크다.

4. 體制와 制度 選擇의 理論

4.1. 經濟體制, 選擇의 對象인가?

人間事의 모든 것이 그러하듯 경제체제도 선택의 대상이 된다. 물론 경제체제란 주어진 예산 제약 아래서 정해진 값에 물건을 사듯 그렇게 쉽게 골라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 기간에 걸쳐 경제주체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더 잘 달성하게 하는 방향으로 경제체제 조차도 변형시켜 나가려고 노력한다는 점에서 경제체제도 선택의 대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體制라는 선택 대상이 지닌 특성 때문에 체제 선택의 문제를 여타 재화나 용역에 관한 선택의 문제로 이해하는 데에는 많은 문제가 따른다. 체제란 어느 누구에게도 독점적으로 귀속되지 않으면서 동시에 구성원 전체가 그에 영향을 받는 특수한 '財貨'다. 물론 시장에서 직접 거래되지도 않으며 그 가격이 명시적으로 책정되지도 않는다. 체제가 지닌 재화로서의 이러한 특성을 따진다면 아마도 그것은 公共財에 가장 가까울 것이다. 따라서 체제 선택의 문제를 이해하는 한 가지 방법은 그것을 공공재 선택의 문제로 이해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신고전파 경제학에서는 경제체제를 주어진 조건으로 취급해 왔으며 그렇기에 제도학과나 역사학과로부터 체제나 제도에 관해 너무 皮相的으로밖에 이해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그러나 신고전파 경제학에서 경제체제를 주어진 것으로 보는 것은, 현재 관심을 갖고 규명하려는 경제문제를 다룸에 있어서는 경제체제를 주어진 것으로 보고 그 문제를 설명해도 관계가 없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원래부터 경제체제란

선택의 範疇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해하고자 하는 문제의 성격에 따라서는 경제체제 역시 얼마든지 선택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사실 신고전파 이론은 경제행동을 선택의 과정으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그 어떤 이론체제에 비해서도 선택의 문제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며 단기적으로는 주어진 조건으로 이해하는 것조차도 장기에서는 선택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점에서 체제 선택의 문제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큰 이론체제라 할 수 있다.

4.2. 新古典學派의 體制 選擇 理論

신고전파 경제학은 선택의 일반이론을 증시한다. 選擇의 一般理論이란 선택의 主體, 선택의 對象, 선택의 方法, 選擇結果의 處理 등에 관한 一貫된 體系를 指稱한다. 신고전파 경제학에서는 개인 또는 개인들로 구성된 집단이 선택의 주체가 된다고 본다. 선택의 대상은 선택의 주체가 소유한 물질적, 육체적, 정신적, 지적 능력과 선택의 주체가 따라야 할 제반 여건간의 상호 작용에 의해 정해지는 選擇可能한 集合에 속한 代案들이 된다. 선택의 방법은 각 선택 주체의 판단에 따라 선택 가능한 대안들 중에서 그가 원하는 바를 달성하는 데 가장 잘 부합하는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다. 선택결과에 처하는 한 선택 주체가 선택한 것이 다른 선택 주체가 선택한 것과 相衝할 때 그 利害關係를 적절히 調節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경제체제 선택의 문제 역시 이와 같은 선택의 일반이론 체계 내에서 이해할 수 있다. 먼저 체제 선택의 주체는 누구인가 생각해 보자. 체제 선택의 주체는 그 체제 안에서 살아가는 경제 구성원들이다. 물론 민주주의를 따르는 한 구성된 개인으로서는 체제를 선택할 수 없다. 단지 구성된 다수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에 의해서만 체제를 선택할 수 있다. 독재의 경우에는 독재권력의 의사에 따라 체제가 선택되므로 이 경우에는 독재자가 체제 선택의 주체가 된다. 그러나 독재의 경우에도 단기적으로는 독재자가 체제를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긴 기간을 놓고 보면 구성원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 독재자가 선택한 체제라도 힘있는 구성원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 독재권력 자체가 붕괴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독재자가 체제 선택의 단독 주체가 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체제의 선택이나 체제를 변경하는 일에 있어 한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利益集團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익집단은 다양한 형태를 취한다. 勞動者 단체, 消費者 단체, 環境運動 단체, 企業家 단체, 女性 단체, 言論界, 學界, 宗教界 등 수많은 이익집단들이 각기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체제 선택이나 체제 변경 작업에 참여한다. 이들 이익집단 중에서 政府의 역할이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정부는 본래부터 민간부문이 잘 해결할 수 없

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위임받은 존재이므로 체제 선택이나 체제 변화와 같이 공공재로서의 성격이 큰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게 당연시된다. 그 뿐만 아니라 체제 선택 또는 체제 변화의 내용에 따라 정치 지도자나 관료들의 이해관계가 달라지므로 정부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대로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체제를 바꾸려고 이익집단 중에서도 가장 힘이 센 정부가 지닌 힘을 이용하려들게 마련이다.

체제 선택의 문제에 있어 선택의 대상은 물론 일차적으로 경제 체제이다. 일단 체제를 선택하면 선택한 체제를 실제로 구현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장치나 기구를 선정하거나 기존의 기구나 장치를 고치는 일이 선택의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일차적인 선택의 대상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 혼합경제 체제 등이 될 것이며, 만일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선택하기로 하였다면,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각종 제도적 장치와 기구를 선택하는 일이 이차적인 선택의 대상이 될 것이다. 아울러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지금까지 사용해오던 기구나 제도적 장치를 변화시키는 일도 중요한 선택의 대상이 된다.

체제의 선택이나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먼저 建國 또는 開國에 따른 체제 선택의 문제를 생각해 보자. 이 문제는 비교적 단순하다. 民主國家라면 憲法에 體制의 性格에 관한 條項을 실고 이를 國民投票에 부쳐 그 결과에 따라 체제를 선택하게 될 것이고 獨裁國家라면 獨裁者의 意思에 따라 체제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국가의 경우에는 헌법의 체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구성원간에 활발한 토론과 설득 작업을 진행한 후 헌법 통과에 필요한 수 이상으로 구성원의 동의를 획득하면 체제가 확정된다. 대한민국이 정부수립과 더불어 자본주의 시장경제 국가로 체제를 선택한 것이 그러한 예이다. 물론 독재국가라면 독재권력자의 의지에 따라 체제가 선택될 것이다. 예를 들어 1917년의 혁명 후 러시아가 소비에트 공산체제를 선택한 것이라든지 남북 분단 이후 북한에서 공산주의 체제를 선택한 것이라든지 모택동의 승리에 따라 중국이 사회주의 체제를 선택한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다른 예로는, 구소련의 붕괴에 따라 소련, 동구권 및 구소련 연방국가들이 공산주의 체제를 포기한 것을 들 수 있다. 이것은 革命的인 狀況을 통해 체제가 급격히 변화한 예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처럼 국민투표 또는 독재권력에 의해 체제가 정해지는 것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대부분의 경우 체제 선택의 문제는 체제 변화의 문제 즉, 기존의 체제를 변화시키는 것에 관한 선택의 문제이다. 그렇다면 체제 변화에 관한 선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체제 변화에 관한 선택 역시 체제 자체를 선택하는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 국민투표를 하건, 여론조사에 의하건, 국회의 의결을 거쳐 하건, 지도자의 판단에 따

라 선택하건 선택의 방법은 동일하다. 다른 점은 단지 선택의 대상이 체제 자체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덜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체제를 선택하거나 체제를 변화시켜 나가는 일은 선택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이미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표출되어 조정되므로 일단 선택이 이루어지면 그것을 구성원 모두가 따라야 한다. 즉, 선택이 이루어진 후 추가적인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하지 않다. 이 점에 있어 체제 선택이나 변경의 문제는 수요 또는 공급의 형태로 표출되는 개개인의 선택이 시장의 경쟁과정을 거쳐 자동 조절되는 것과 다르다. 물론 사전적인 조정의 과정을 거쳐 체제를 선택하였다라고 그것을 실제로 사용해본 결과 부작용이 드러나면 구성원 중에서 그것을 변경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그런 사람의 힘이 다수를 이루게 되면 다른 체제를 선택하거나 체제의 내용을 변경시키는 작업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상에서 살펴 본 신고전파의 체제 선택이론에서는 사전적으로 합리적인 思考의 과정을 거쳐 어떤 것이 구성원들이 원하는 바를 가장 잘 달성하게 해 주는 체제인가 또는 체제의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나 기구인가를 생각하여 그러한 대상을 선택하며, 선택한 체제나 기구 또는 제도를 운용해 본 후 그것이 구성원들이 원하는 바를 달성하는 데 공헌함이 부족하면 그보다 더 나은 체제나 제도 또는 기구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으로 인식한다.

4.3. 하이에크의 進化論的 體制 選擇의 理論

신고전파 선택 이론은 지나치게 合理性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비판을 받는다. 개별 경제주체가 사적인 용도로 시장에서 재화나 용역을 사고 파는 것이 선택의 대상이 될 경우에는 그가 합리적인 계산에 의거해 결정을 내린다는 가정에 큰 무리가 없으나, 경제 체제와 같이 선택의 대상이 多元的이고 公共的인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費用 便益 分析을 한 다음 어떤 것이 좋다고 결정되면 그대로 밀고 나가는 식의 의사결정을 想定하는 데에는 무리가 따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독재자가 결정하건 다수결에 의해 결정하건 체제 선택의 문제를, 선택의 주체가 선택의 대안들을 철저히 비교 평가하여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 즉, 合理的 意思決定의 문제로만 국한해서 이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경제 체제를 선택하거나 체제를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이 경제주체들의 의식적인 노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체제 선택이나 체제 변혁의 과정 중 경제주체들의 의식적인 노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부분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自生的 變化의 메커니즘에 의해 선택이 이루어지거나 변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다. 자생적 변화의 메커니즘이란 경제 체제나 경제 체제를 실제로 구현하는 데 쓰이는 경제제도가 어느 누구의 의식적인 노력에 의해 선택되거나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체제와 제도 자체의

자생적인 진화의 과정에 의해 선택되거나 變貌되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자생적인 진화의 과정이라는 것은 오직 繪畫의인 설명일 뿐 실제에 있어서는 수많은 경제주체들의 無意識의인 行動의 結果가 累積되어 체제가 선택되고 변화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사전적으로 모든 정보를 갖고 충분히 분석하여 최선의 방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각자 최선을 다해 노력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더 나은 방향으로 체제를 개선해 나가게 되는 측면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어떤 체제가 최선이고 어떻게 체제를 변혁하는 것이 최선인지 사전적으로 알기는 힘들고 오직 수천만 명이 참여하는 일상의 경제활동을 통해 구성원들의 이익에 보다 더 잘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문제는 과연 그러한 자생적 진화의 메커니즘이 잘 작동하겠는가 하는 점과 자생적 진화의 메커니즘이 작동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구성원들의 이익에 보다 더 잘 부합하는 방향으로 가겠는가 하는 점이다. 자생적 메커니즘은 그 특성상 개별 경제주체들이 그들이 원하는 바를 그들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선택하고 개별 경제주체가 선택한 결과가 자율적으로 조정될 때 가장 잘 작동할 것이다. 즉, 개별 경제주체의 자유가 최대한으로 보장되며 시장을 통한 자율조정이 허용되는 사회에서 자생적 메커니즘이 가장 잘 작동된다. 반면 개인의 자유를 억제하고 시장의 자율조정메커니즘에 간섭하면 할수록 자생적 진화의 메커니즘은 그 효용성이 저하된다.

자생적 진화의 메커니즘이 과연 구성원들의 이익에 가장 잘 부합하는 방향으로의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해서 선택적인 답을 내리기는 힘들다. 한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결과가 설령 나쁜 것일지라도 그것이 각자의 자유의사에 의해 선택한 행동의 결과라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일 것이다. 물론 이런 주장에 대한 반론도 강력히 제기된다. 어떻게 결과가 잘못되는 것을 보고 이성을 지닌 인간이 그대로 있어야 하는가라고 반문할 수 있을 것이다. 그에 대한 답은, 바로 그러한 시각에서 현실을 뜯어고치자고 노력한 결과가 오히려 더 나쁜 상태로 이끈 경우가 많으므로, 소수가 주도하는 밖으로부터의 개혁은 항상 조심스럽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될 것이다. 자생적 진화의 메커니즘이 좋은 결과로 끝아가는가의 여부는 오직 역사만이 판단할 수 있다. 지난 200여년의 인류사를 회고해 보면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 메커니즘을 중시한 곳에서 가장 나은 사회발전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이 자생적 진화의 메커니즘이 궁극적으로 인류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간다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4.4. 意圖的 選擇의 메커니즘과 自生的 進化의 메커니즘간의 調和

구성원 각자에게 自由를 최대한 保障해주고 그가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物質的 土臺가

되는 私有財産權을 적극적으로 保護해주어, 누구이건 자기가 갖춘 능력의 범위 내에서 自己判斷에 따라 자기가 원하는 바를 선택할 수 있게 許容하고, 그 선택의 결과가 시장 참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自律적으로 調停되도록 내버려두면 靜態적으로는 가장 바람직한 資源配分이 이루어지고 動態적으로는 가장 바람직한 자원배분이 이루어지도록 체제와 제도도 自生的으로 진화해 나아갈 것이라는 체제 선택과 체제 변혁에 관한 자생적 진화론에 대해 人間理性的의 優越性을 강조하는 많은 知識人들은 同調하지 않는다.

이성을 중시하는 지식인이나 革命家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理想郷을 이룩할지 알 수 있는데도 그러한 지식을 활용하지 않고 正體도 不分明한 자생적 발전 메커니즘에 인류의 운명을 맡긴다는 것은 語不成說이라는 것이다. 그러한 지식인이나 혁명가들 중 熱情이 특히 강한 사람들은 人間事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 해법을 제시하며 理性的對話나 說得을 통해 變革이 불가능하다면 革命的인 방법이나 獨裁權力을 활용해서라도 이상형을 건설하고자 노력한다. 체제나 제도의 선택과 관련하여 인류의 역사는 그러한 변혁을 수없이 많이 경험하였다. 宗教革命, 영국이나 프랑스의 市民革命, 미국의 獨立戰爭, 소련과 中國에서의 共產主義 革命 등이 그러한 예이다.

지식인과 혁명가의 그러한 노력은 때로는 자생적 진화의 메커니즘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자생적 진화의 메커니즘을 방해하기도 한다. 사실 그들의 노력도 큰 테두리에서 보면 자생적 진화의 메커니즘이 內包하는 한 부분에 불과하다. 문제는 지식인이나 혁명가의 체제 선택이나 체제 변혁의 노력이 구성원의 자발적 동의를 얻어 진행되는가 아니면 강압적인 방법에 의해 진행되는가 하는 것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강압적인 방법을 동원하거나 여론 또는 정보 조작을 통해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그들이 원하는 바를 강요할 때 발생한다.

20세기의 후반기에 들어와 세계 도처에서 일어난 변화를 살펴보면, 지식인이나 혁명가에 의한 타율적이고 강압적인 변화의 메커니즘이 점차 쇠퇴하고 시장을 중심으로 한 자생적 진화의 메커니즘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방 선진국에서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진 것이라든지 공산권 국가들이 공산주의 계획경제체제를 버리고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한 것이 그 좋은 예이다. 그렇다고 해서 개혁적 지식인과 혁명가가 이성의 힘을 활용해 체제를 변혁하려는 시도를 멈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한 시도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루어질 것이며 때에 따라서는 그들의 선전·선동이 먹혀 들어가 전혀 예상치 않은 방향으로의 변화가 이루어지기도 할 것이다. 히틀러,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카스트로 등을 배출한 인류가 또 어떤 인물을 追從하여 破滅을 가져올지 알 수 없는 일인 것이다.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지식인이나 혁명가를 억압하라는 주장이 아니다. 그와는 전혀 반대로 그들도 자유로이 의사를 표시할 수 있게 허용할 것을 주장한다. 자유와 재산권은 누구에게나 보장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경계해야 할 것은 지식인이나 혁명가가 강압적인 방법을 쓰거나 정보를 왜곡하여 다수의 민중을 오도하는 것이다. 이 중 강압적인 방법을 쓰는 것은 어느 경우에건 반대해야 한다. 지식이나 정보를 왜곡하여 민중을 선동하는 것은 경계해야 하나 그렇게 하는 일이 言論의 自由를 보장하는 일과 상치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아마도 언론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함으로써 主張과 反主張이 모두 자유롭게 開陣되어 구성원 스스로가 어느 것을 따를지 判斷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나은 해법이 될 것이다.

5. 體制選擇理論의 應用: 財閥改革에 關하여

체제 선택이나 체제 변혁에 관한 이제까지의 논의를 응용할 수 있는 대상은 무궁무진하다. 급세기 하반기에 들어와 전세계 각국에서 일어난 체제 선택의 실제문제에 대해 적용할 수도 있으며, 어떤 한 나라 가령 한국에서 지난 50년에 걸쳐 정부의 역할이 변화해온 과정을 이해하는 데 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문제를 아주 좁혀 현재 우리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벌문제에 대해 이제까지의 논의를 응용해 보기로 한다.

재벌문제란 무엇인가? 재벌문제의 핵심은 대규모 企業集團 즉 財閥 중심으로 짜여 있는 우리 나라 경제의 企業構造를 그대로 둘 것인가 아니면 개혁할 것인가, 개혁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 놓여 있다.

1960년대 후반기에 태동하기 시작하여, 1970년대에 들어와 완전한 모습을 갖추며 성장을 거듭하여 1980년대 후반기 이래 한국경제를 주도해오고 있는 재벌은 그 동안 우리 나라 경제의 성장발전을 주도해 왔다는 공헌에도 불구하고 근래에 들어와 심각한 비판에 직면해 있다. 특히 1997년의 경제위기를 맞아 위기의 主犯이 재벌이라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 국민의 대다수가 재벌의 개혁을 열망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재벌의 개혁을 바라는 이러한 국민적 열망은 과연 100% 옳은 것일까? 재벌체제가 갖는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만일 재벌체제의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다면 그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재벌체제가 갖는 단점을 해결하면서 동시에 재벌체제가 지니는 장점은 더욱 살리는 방안이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벌에 관한 논쟁의 주요 쟁점들이다.

여기에서 우리의 목표는 재벌체제의 장단점을 분석하자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것대

로 중요하지만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재벌체제의 형성과 변화의 과정을 위에서 논의한 체제 선택과 체제 변혁의 이론적 틀 안에서 이해해 보자는 것이다.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재벌체제가 어떻게 형성되어 발전해왔으며 또 어떤 과정을 거쳐 변모되어 가는지 알아보기로 하자.

5.1. 財閥體制的 形成: 意圖的 選擇의 結果

재벌체제가 현재의 모습을 갖게 된 데에는 크게 보아 두 개의 체제 형성 메커니즘이 작동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 하나는 소수의 경제주체에 의한 의도적인 선택의 메커니즘이고 또 하나는 다수의 시장참여자에 의한 암묵적인 선택의 메커니즘이다.

재벌의 모태는 綜合貿易商社이다. 祖國 近代化를 旗幟로 내세워 정권을 잡은 朴正熙 정부는 1960년대에 걸쳐 對外 指向的 成長戰略을 채택하여 輸出增大에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당시 아직 국제시장 개척의 경험이 일천하였던 국내기업들은 수출시장에서 情報 및 資金의 不足으로 수출에 많은 隘路를 겪고 있었다. 이러한 애로사항을 타개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 종합무역상사제도이다. 수출품 제조업체 및 수출·대행업체를 도와줌으로써 수출증대를 도모하던 정부는 제한된 財源 때문에 모든 기업을 동시에 다 도와줄 수가 없었으므로 수출업체 중 先頭走者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해줌으로써 그들이 모든 수출업체를 앞에서 끌어가게 하는 전략을 선택한 것이다. 이와 같이 수출을 선도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것이 종합무역상사로서 정부는 당초 10개의 민간기업을 선정하여 종합무역상사를 설립해 운영하도록 독려하면서 金融 및 稅制上的 惠澤을 부여하였다.

종합무역상사들은 정부의 수출촉진정책에 힘입어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다. 종합무역상사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 중 가장 중요한 것은 金融支援이었다. 低金利政策에 따른 慢性的인 資金不足에 시달리던 기업들에게 있어 低利의 資金供給源을 安定的으로 확보하는 일은 매우 큰 혜택이었다. 정부의 금융지원과 수출로 벌어들인 外貨資金을 바탕으로 설립 당시 대기업의 系列企業이라는 邊方의 위치에 놓여 있던 종합무역상사들은 점차 대기업 집단의 母企業이라는 中心部의 위치로 그 位相을 變貌시켜 나갔다. 종합무역상사를 거느린 대기업들이 종합무역상사가 지닌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하여 關聯 또는 非關聯 기업들을 설립함으로써 船團式 經營體制를 형성하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당초 설립되었던 종합무역상사들이 다 성공한 것은 아니다. 그 중에는 경영의 부실로 중도 退出된 곳도 많이 있다. 아무리 정부가 지원해주더라도 경영의 승패는 결국은 해당기업의 경영능력에 달린 것이었으므로 시장경쟁에서 실패하는 기업이 출현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종합무역상사의 실패는 많은 경우 그것이 속해 있던 기업집단 자체의 붕괴를 가져왔으며 그런 사태가 발생하자 정부는 신속하게 다른 기업이 종합무

역상사를 설립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새로운 기업집단의 형성을 助長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와 정부의 産業政策은 1960년대의 경공업제품 중심의 수출입국정책에서 重化學 工業化 정책으로 변모하였다. 석유화학, 철강, 조선, 자동차, 전자 등의 중화학공업에 대해 그것이 앞으로 한국 경제를 이끌어갈 基幹産業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과 자주국방을 위해 防衛産業을 육성하자면 중화학공업화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중화학공업화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 시책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중화학공업 분야는 그 시설투자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필요로 했기에 그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능력을 어느 정도 지녔던 것은 종합무역상사를 모태로 하여 성장해온 대기업밖에 없었으므로 중화학공업화 정책은 자연히 대기업 지원정책이 될 수밖에 없었다.

중화학공업화 정책에 힘입어 종합무역상사를 주축으로 해 성장한 대기업 집단은 더욱 더 그 규모가 커져갔다. 그들은 수십 개의 관련 기업을 거느리며 국민 경제에서 높은 비중을 점하는 電子, 自動車, 鐵鋼, 石油化學 등의 주요 製造業은 물론 金融業과 流通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며 성장에 성장을 거듭하였다. 그 결과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금융, 보험, 무역, 유통, 화학, 전자, 자동차, 철강, 조선, 건설 및 통신 등 국민경제의 주요 분야에 걸쳐 상위 그룹에 속하는 기업을 다수 거느린 대기업 집단이 다수 출현하였다. 이 때에 이르러서는 종합무역상사는 그들이 초기에 지녔던 중요성을 상실하여 그룹 내의 무역 유통 전담 기업으로 그 위상이 격하되었다. 이들 기업 집단은 相互 出資 또는 持分保有를 통해 실질적으로 하나의 기업을 이루고 있었기에, 주식 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다수 포함하고 있었음에도, 실제에 있어서는 創業者인 大株主가 그룹 경영에 관해 전권을 행사하는 巨大 個人企業에 지나지 않았다. 이 거대 개인기업 즉 개인기업적 성격이 강한 대기업집단을 가리켜 재벌이라고 한다.

5.2. 財閥體制의 變貌: 意圖的 選擇과 自生的 進化的 並存

1980년대에 들어와 재벌은 또 한차례 크게 성장하였다. 한국 경제는 1980년 초반에 급격히 증가하는 外債의 무게에 눌려 자칫 坐礁할 수도 있는 위기를 맞이하였으나 1980년대 중반 이후 三低效果라는 國際經濟環境의 호전에 힘입어 前代未聞의 大好況期를 경험하며 연 10%를 넘는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한편 대폭적인 貿易收支黑字를 기록하였다. 이 시기 이러한 눈부신 경제성장에 있어 재벌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들이 진출해 있던 자동차, 철강, 조선, 석유화학, 전자 등 중화학공업 제품이 1980년대 후반 이후 우리나라 수출의 대종을 이루며 고도 경제성장의 주역이 된 것이다. 이 당시 사상초유의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를 통해 벌어들인 자금을 바탕으로 해서 재벌 특히 5대 재벌은 그 社勢를 크게 확장하였다. 새로운 업종에 진출하였으며 생산설비를 대폭적으로 확장하는 투자에

과감하게 나선 것이다. 그 결과 1980년대를 마감하며 한국 경제는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재벌에 속한 기업들이 주도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에 이른 것이다.

1990년대에 들어와 재벌 체제에는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무엇보다도 재벌 사이에 兩極化 현상이 뚜렷하게 벌어졌다. 상위 5대 재벌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肥大해진 반면 10대 이하의 재벌들은 상대적으로 萎縮되기 시작하여 더 이상 재벌이라고 부르기도 어려울 지경이 되었다. 1990년대 중반에 들어와 10대 이하의 재벌 중 倒産하여 그룹 전체가 붕괴되는 경우가 속출함에 따라 그러한 양극화 현상은 더욱 더 뚜렷해졌다. 재벌체제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한 것은 1997년의 經濟危機이다. 1997년 하반기에 한국 경제는 전례가 없는 경제위기를 경험하였다. 이 경제위기의 본질은 外換危機, 金融危機 및 企業危機로서, 외환부족에 따른 국가파산의 위험이 위기를 촉발한 直接的 요인이라면 장기간에 걸쳐 심화되어온 기업부문의 부실과 그로 인한 금융부문의 부실이 위기의 根源的 요인이었던 것이다. 이 중 금융부문과 기업부문의 동반부실화의 중심에 재벌이 놓여 있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확산됨에 따라 1998년에 들어와 대대적인 기업구조개혁 조치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취해진 企業構造改革 조치들은 기실 재벌체제 그 중에서도 5대재벌을 개혁하기 위한 조치였다. 물론 6대 이하 재벌들도 많은 문제를 지녔으나 그 중 일부는 스스로 개혁을 추진하여 변신을 시도하고 있으며 또 다른 일부는 부실경영의 중압을 견디다 못해 형체만 남은 껍데기 재벌로 전락하였으므로 문제가 된 것은 5대 재벌이었다. 5대 재벌이 문제가 된 것은 그들이 지닌 경제력이 국민경제의 크기에 견주어 상대적으로 너무나 커서 경제력 집중이 낳는 부작용을 露骨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5대 재벌조차도 財務構造의 不實化 조짐을 보였기 때문이었다. 만일 5대 재벌 중 하나라도 도산하는 날에는 그것이 가져올 국민 경제적 파장이 너무나 클 것으로 판단하여 재벌을 개혁해야 한다는 共感帶가 형성되기에 이른 것이다. 게다가 경제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최고 통치자의 의중이 곧 법이요 정책이 되는 한국의 현실에서 1997년 12월에 새로 선출된 金大中 대통령 및 그 參謀陣이 지닌 反財閥 성향이 재벌 개혁을 더욱 앞당기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러한 내외의 압력을 받아 1998년 이후 재벌의 모습이 크게 변모되기 시작하였으며 그러한 변화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재벌 개혁 의지가 확고하며 시장 여건의 변화가 과거와 같은 재벌체제의 지속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재벌체제의 변모를 촉진하고 있는 시장 여건의 변화 가운데 중요한 것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金融市場의 변화이다. 경제개혁의 중요 부분인 金融改革이 진행됨에 따

라 금융기관이 재벌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던 관행이 이제 더 이상 통용되지 않게 되었다. 즉, 금융기관 및 금융시장이 지닌 企業監視機能이 정상화됨에 따라 재벌이라도 수익성이 없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자금을 조달하기가 용이하지 않게 된 것이다. 둘째, 對外經濟 與件의 변화이다. 국제화의 가속적인 진전에 따라 시장이 전면적으로 개방되어 경쟁이 치열해 갈 뿐 아니라 외국기업의 국내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짐에 따라 우리 기업의 국제화가 크게 진전되어 과거와 같은 오너 중심의 재벌체제를 유지하는 일이 이제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셋째, 規制 및 監視機關을 통한 企業監視體制가 강화되고 있어 재벌이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넷째, 재벌의 성장에 있어 중요한 기능을 담당했던 政經癒着의 고리가 점차 瓦解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변화는 무엇보다도 재벌체제가 지녔던 여러 가지 反市場의인 요소들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재벌체제를 개혁하려는 정책의 변화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생산요소 시장, 생산물 시장, 금융 시장 등 시장의 성장 발전이 이제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재벌체제의 존속을 허용하지 않게 된 것이다. 재벌 특히 5대 재벌은 이렇게 변화된 시장 환경에 적응하여 스스로 변신을 도모하느냐 아니면 외부의 압력에 의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의 개혁을 강요당하느냐의 중요한 갈림길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3. 體制 選擇 및 體制 變化의 理論에 비추어 본 財閥의 形成 및 變貌의 過程

체제 선택 및 체제 변화의 이론 모형이 시사하는 바를 다시 한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체제 선택 및 체제 변화를 이루는 메커니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의도적인 선택의 메커니즘과 자생적인 진화의 메커니즘이 그것이다. 의도적인 선택의 메커니즘은 변화를 주도하려는 소수가 체제에 관한 이상형을 설정하여 현재의 체제를 이상형으로 끌어가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들을 행동계획의 형태로 입안한 후 강제적인 방법으로 그 행동계획을 실천에 옮기거나 아니면 이상형 및 이상형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들에 대해 체제 구성원 다수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쳐 행동계획을 실천에 옮김으로써 체제를 선택하거나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자생적 진화의 메커니즘은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수많은 경제주체들이 각자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체제나 체제를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즉, 자생적으로) 그런 아이디어가 시장경쟁의 과정에서 유용한 것으로 판명되면 다수에 의해 채택되며 (즉, 진화의 과정을 거쳐) 작고 큰 그런 변화들이 누적되어 장기적으로 체제의 모습을 바꾸어 놓는 과정을 의미한다.

의도적인 선택의 메커니즘은 개인 또는 집단이 지닌 理性的의 힘을 중시한다. 그것은 인

간이 지닌 이성의 힘을 사용하여 무엇이 최선인지를 알아낼 수 있으며 그런 최선의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될지 알아낼 수 있다는 신념을 증시하는 메커니즘이다. 그것은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거나 체제를 단계적으로 개선해나가는 데 두루 적용할 수 있는 선택 메커니즘이다. 그것은 가시적이며 목표 지향적인 선택의 메커니즘이며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고자 하는 엘리트층의 선호에 부합하는 메커니즘이다.

의도적인 선택의 메커니즘은 중대한 문제점을 지니기도 한다. 첫째, 인간 이성의 힘을 사용하여 고안해 낸 理想이 과연 最善의 것인가 확신하기 어려우며 그것이 최선의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이상을 달성하는 方法이 과연 최선의 것인가에 대해서도 100% 확신을 가질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인간 이성이란 完璧하지 않으며 불완전한 개인이 모인 집단이라고 해서 반드시 완벽한 의사결정을 한다는 보장이 없다. 따라서 인간 이성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目標 指向的인 의도적 개혁은 자칫 인류를 엄청난 불행으로 이끌어 갈 수도 있다. 둘째, 의도적 개혁의 메커니즘은 개혁을 주창하는 사람들이 개혁의 목표를 정당한 것으로 인식하면 할수록 目標의 正當性을 근거로 手段을 合理化할 위험성을 지닌다.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고 강압이나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강제로라도 목표를 달성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쉬운 것이다.

반면 자생적 진화의 메커니즘은 드러나지 않는 다수의 힘에 의해 체제를 선택하거나 변화시켜 나가는 것으로서 외부적인 강제나 폭력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우 民主的인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어떤 소수의 견해를 따라 체제를 선택하거나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수천만의 경제주체들이 각자 자기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경쟁하는 과정에서 人間의 本性에 附合하고 인간이 원하는 바를 더 잘 달성하게 하는 제도나 기구는 存續하며 發展하고 그렇지 않은 제도나 기구는 退步하며 淘汰되는 '自然的' 選擇의 메커니즘이다. 그것은 인간 이성의 有限性을 전제로 하며, 때로는 소수가 이성의 힘을 활용하여 고안한 방안을 선택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거의 모든 경제 활동에 있어 무엇이 최선인지 사전적으로 완벽하게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다만 경쟁에서 살아남는 제도나 체제가 현재의 주어진 상황에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선의 것이라는 신념을 바탕으로 하는 선택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볼 때 그 동안 진행되어온 재벌의 형성과 변화의 과정은 의도적 선택의 메커니즘이 체제의 선택과 변화를 주도하는 가운데 자생적 진화의 메커니즘이 여건의 변화에 반응하면서 부차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당초 정부가 종합무역상사의 설립을 허용하여 금융 및 세계상의 혜택을 베풀어 수출진흥에 나선 것이나 중화학공업을 육성하기 위해 종합무역상사를 소유한 대기업 집단을 집중 육성한 것은 모두 의도적

선택의 메커니즘이 작동한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1980년대 중반 이후 그리고 1990년대에 들어와 변화되는 국내의 시장환경에 적응하여 몸집을 불려온 재벌의 변화과정은 당시의 경제여건에 맞춘 진화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끝으로 1997년의 경제위기를 맞아 그 이후에 전개되고 있는 재벌개혁의 과정은 의도적 선택의 메커니즘이 매우 강력하게 작동중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때 지난 30여년에 걸쳐 이루어진 재벌체제의 형성과 변화의 과정을 종합평가하자면 자생적 진화의 메커니즘보다는 의도적 선택의 메커니즘이 더 중시되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5.4. 進行中인 財閥 改革의 評價

현재 진행 중인 재벌 개혁의 과정에는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메커니즘이 함께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政府가 財閥體制 改革에 관한 理想型을 설정해 놓고 이를 俱現하기 위해 金融監督委員會, 公正去來委員會, 稅政當局 등이 지닌 금융, 세제 및 규제 상의 제반 手段을 동원하여 재벌체제를 그 이상형에 맞게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데에서 의도적 개혁의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재벌들은 정부의 이러한 압력에 대응하여 때로는 반발하기도 하나 전반적으로는 정부가 세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전긍긍해 하며 따라가는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현재 진행중인 재벌체제의 변화 중에는 技術變化와 시장의 競爭環境 變化에 따라 재벌 스스로가 살아남기 위해 변화를 꾀하는 부분도 적지 않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재벌에 속한 기업들이 사업을 영위하는 분야의 생산물 시장이나 생산요소 시장이 1990년대 중반 이후 급격히 開放化, 自律化됨에 따라 企業間 競爭이 전과는 달리 나날이 치열해져가고 있다. 정부에 의한 금융 세제상의 도움을 통해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던 시기가 지났으며 재벌이라도 치열한 국내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스스로 體質改善을 도모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것은 재벌 체제 개혁의 과정에 자생적 진화의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예가 된다.

정부가 주도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재벌을 개혁한다는 것은 재벌을 개혁함에 있어 위에서 논의한 의도적 선택의 메커니즘을 중시함을 의미한다. 이것이 성공하려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前提條件이 充足되어야 한다. 첫째, 改革을 主導하는 集團이 우리 나라 經濟의 將來를 위해 어떠한 企業構造가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 알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이때 바람직한 것의 판단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특히 政治的인 考慮을 排除할 수 있어야 하며 개혁을 주도하는 세력의 이데올로기에 따라 개혁의 목표가 歪曲되면 안 될 것이다. 둘째, 어떤 기업구조가 우리 나라의 장래를 위해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 알아냈을 때 그것을 달성하는데 있어 最善의 方法은 무엇인가 알 수 있어야 한다. 또한 時限을

정해놓고 그 안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개혁을 完遂하도록 督勵하여야 할 것인가 아니면 적절한 誘引體系를 통해 그쪽으로 끌어갈 것인가 하는 것도 분명히 해야 한다. 셋째, 그렇게 해 알아낸 최선의 방법을 실천에 옮김에 있어 그것을 모든 재벌에게 公平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즉, 恣意的인 判斷이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만일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되면 또다시 政經癒着이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재벌 개혁 프로그램을 보면 위에서 열거한 前提條件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설령 財閥改革이 至上的 命題라 하더라도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우리 나라 經濟의 將來를 위해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 充分한 討議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개혁이 진행된다는 인상을 준다. 재벌체제가 가질 수도 있는 長點에 대해 언급하는 사람들을 輿論裁判을 통해 罵倒하는 것이 그 좋은 증거가 된다. 아무리 목표가 고상하다 하더라도 자기만 다 옳다는 인식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이를 위해서는 재벌체제가 지니는 장점은 무엇이며 단점은 무엇인가를 객관적으로 엄밀하게 분석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의 개혁 작업은 그러한 노력은 소홀히 한 채 改革의 當爲性만 강조하여 무조건 따라오라는 식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준다.

둘째, 개혁 이후의 재벌의 모습이 무엇이어서 하는가에 관해 정부가 상정한 그림이 과연 최선의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정부가 상정한 그림을 구현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方法에도 많은 문제가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세정당국, 금융감독당국,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활용하여 기한내에 정부가 상정한 그림과 같아질 때까지 재벌의 모습을 바꾸어 놓기 위해 각종 개혁 프로그램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여론이 매우 우호적인 지금이야말로 재벌을 개혁할 수 있는 天惠의 機會이므로 이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強力하고도 迅速한 改革 措置를 취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사실 개혁 주도 세력은 기간 내에 재벌개혁을 완료할 수 없을까 보아 대단히 초조해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재벌의 저항에 부딪쳐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인식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듯 보인다.

셋째, 재벌 개혁 프로그램이 모든 재벌에 대해 公平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재벌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물론 말을 잘 듣는 재벌과 그렇지 않은 재벌에 대해 개혁을 주도하는 측에서 상벌의 원칙에 따라 달리 대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사전적으로 賞罰의 基準을 명확히 설정하고 상을 받을 만하면 누구나 상을 받으며 벌을 받아야 한다면 그게 누구건 벌을 받도록 하여야 함에도 실제로 전개되는 상황은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인상을 강하게 풍기므로 문제인 것이다. 개혁을 당하는 당사자나 개혁을 추진하는 세력이나 옆에서 관전하는 사람들이 재벌

改革이 偏頗的으로 이루어진다는 인상을 갖게 되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재벌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옳은가? 필자의 판단으로는 의도적 선택의 메커니즘은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사용하고 재벌 개혁의 대부분은 자생적 진화의 메커니즘에 맡겨 두는 것이 현명하다는 생각이다.

의도적 선택의 메커니즘은 어떠한 기업구조가 한국 경제의 장래를 위해 바람직한가, 그러한 기업구조를 구축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가와 같은 물음에 대한 답을 구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유의할 것은 이와 같은 물음에 대해 理性的 論議의 과정을 거쳐 도출한 답이 오직 하나의 示唆을 줄 뿐 그것이 반드시 정답이 아닐 수도 있음을 인정하는 일이다. 인간 이성이란 완전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이성적 논의의 과정을 거쳐 도출된 방안이 반드시 최선의 해답이라는 보장이 없다. 뿐만 아니라 이성적 논의의 과정을 거쳐 결론을 도출함에 있어 그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個人的 利害關係를 완전히 떠나 오로지 국민 경제적 관점에서만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일임을 인정해야 한다. 그렇기에 의도적 선택의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문제를 모두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것을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삼아 시험적으로 실행에 옮겨 보고 성과가 좋으면 전면적인 적용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재벌개혁에 있어서 자생적 진화의 메커니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정부는 모든 경제주체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經濟行爲의 基本規範을 制定하여 執行하는 데 전념하는 한편 自由로운 競爭에 방해가 되는 모든 障礙物을 제거함으로써 경제주체들이 상호간에 健全하고도 熾熱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내버려두면, 치열한 시장경쟁의 과정에서 살아남는 기업체제가 그 사회가 지닐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企業體制가 될 것이므로, 일체의 人爲的인 干涉과 統制를 排除하고 특히 反競爭的인 조치들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을 의미한다. 즉, 어떤 기업구조가 가장 바람직하다는 이상형을 미리 상정하여 현재의 기업구조 특히 재벌구조를 이상형과 같게 만들기 위해 현재의 구조를 억지로 뜯어고치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자유롭고도 공정하며 건전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면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기업들 특히 재벌들이 기존의 경기참여자 그리고 반경쟁적인 조치의 철폐로 등장하게 될 새로운 경기참여자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경쟁을 승리로 이끄는 기업구조가 저절로 형성될 터인데, 바로 그와 같이 진화의 과정을 거쳐 자생적으로 형성된 기업구조가 우리 나라 경제에 가장 적합한 기업구조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그 동안 추진되어 온 재벌간 빅딜 정책에 대해 생각해 보자. 이것은 재벌들이 無謀하게 過當競爭을 일삼아 重複 過剩 投資를 했으며 그 과정에서 빚을 많이 져 재무

구조가 취약해지고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어 경제위기를 가져온 커다란 원인이 되었다는 현상 인식에 근거하여 특정 재벌더러 어떤 업종에서 손떼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재벌들이 類似 事業分野를 서로 바꿈으로써 한 재벌이 많은 사업분야를 경영하는 것보다 소수의 사업분야에 전념하게 함으로써 국제경쟁력 있는 일류기업을 만드는 게 낫다는 생각에서 재벌들이 서로 사업을 맞바꾸도록 하는 정책이다. 이는 의도적 선택의 메커니즘이 작동한 전형적인 예가 된다.

그러나 문제는 사업분야를 맞바꾸는 것이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과연 최선의 정책인지 그 누구도 모르며 더구나 시한을 정해 사업분야를 맞바꾸도록 강요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모른다는 데 있다. 이 경우에 설령 재벌이 소위 문어발식 경영을 하는 게 나쁘다는 인식이 옳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더 좋은 방법은 對內外에 걸쳐 反競爭的인 要素들을 除去하고 금융이나 조세상의 特惠措置들을 모두 除去함으로써 재벌과 재벌 그리고 국내 재벌과 외국의 巨大企業들이 경쟁을 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재벌과 재벌 그리고 재벌과 외국기업들이 서로 치고 받는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동안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더 많은 利潤을 남기기 위해 필요하다면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재벌 스스로가 판단하여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업부문을 정리하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경쟁을 승리로 이끄는 기업구조가 살아남게 될 터인데 저 혼자 힘으로 경쟁에서 살아남았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가장 競爭力 있는 기업구조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기업구조가 현재의 상황 아래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기업구조가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기업구조의 개혁이 처음부터 어떤 先知者가 있어 이것이 좋으니 그리로 가자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기업들이 시장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바람직한 기업구조를 찾아감으로써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의도적 선택의 메커니즘이 잘못된 결과를 낼 수 있는 또 다른 예로 5대재벌의 負債比率를 1999년말까지 200% 이하로 낮추라는 정책에 관해 생각해 보자. 이것 역시 企業部門의 過多한 負債가 우리 나라 기업의 경쟁력을 낮추는 가장 큰 요인이며 나아가 경제체제의 安定性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이므로 기업 특히 재벌기업의 부채비율을 낮추는 것이 긴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재벌들더러 알아서 자율적으로 부채비율을 낮추라고 하면 여러 가지 핑계를 내세워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려 할 것이 분명하므로, 부채비율을 낮추어야 할 時限과 달성해야 할 부채비율의 上限線을 제시함으로써 정해진 기간 내에 정부가 원하는 바에 맞는 기업구조를 만들어내겠다는 정책이다. 이 역시 의도적 선택의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전형적인 예이다.

대다수 국민들이 기업 특히 5대재벌의 과다한 부채비율이 경제위기를 나온 주범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5대재벌의 부채비율을 낮추는 정책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異見이 제기되는 것은 목표로 하는 負債比率의 上限線 및 그 목표를 달성해야 할 時限이 과연 올바른가 하는 점이다. 먼저 부채비율에 관해 생각해 보자. 모든 산업, 모든 기업에 대해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유지하는 게 과연 가장 바람직한 財務構造인가? 이 문제에 대해 아무도 그것만이 최선이라는 대답을 제시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은 부채비율을 낮추면 좋겠다는 것일 뿐 모든 기업이 다 200% 이하로 유지하면 그로써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특히 企業財務에 관해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어떤 기업의 자금조달 구조에 있어 얼마만큼의 負債比率가 가장 適正한가 하는 것은 기업이 수행하는 사업이 지니는 經濟的 特性, 利率率, 租稅制度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알아낼 문제로서 모든 기업이 일률적으로 200% 이하의 부채비율을 유지해야 좋다는 근거는 매우 약하다는 견해를 피력한다.

1999년말로 시한을 정해 그 때까지 어떤 일이 있더라도 200% 이하의 부채비율을 달성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금융 세제상의 제재를 가하겠다는 정책에 대해서도 많은 비판이 따른다. 개혁을 추진하는 세력이 가장 빠른 기일 내에 기업 개혁을 완수한 후 다른 일에 전념하려는 조급성을 이해 못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1999년말을 시한으로 정한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분분하다. 왜 하필이면 1999년말까지인가? 물론 아무도 이 질문에 명쾌한 답을 제시하지 않는다. 우리가 듣는 대답은, 2000년도에 치러질 선거를 포함한 향후의 정치일정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재벌 개혁을 지체하다가가는 아무 것도 이를 수 없으므로 어느 정도의 무리가 따르더라도 이 기회에 빨리 개혁을 마무리하는 게 낫다는 설명이다.

5대재벌의 부채비율을 낮추려는 정책에 있어 또 하나의 문제는 그것이 다분히 強壓的인 방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때까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기업이나 기업주에 대해서는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제재하겠다는 것을 공표하고 또 실제로 이따금씩 그런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5대재벌을 전방위로 옥죄고 있는 게 현실이다. 재벌 개혁조치가 얼마나 강력하게 취해지고 있는지는, 빅딜이나 부채비율 달성에 관해 異見을 표명하는 사람들을 親財閥 反改革的 人事로 매도하는 데에서도 잘 알 수 있다. 그냥 두어서는 안 할 것이므로 채찍을 가해서라도 뜯어고치는 게 낫지 한가하게 기다릴 형편이 아님을 알면서도 自律的인 구조조정을 옹호하는 것은 개혁을 반대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의 경험으로부터 강제로 하는 개혁이 얼마나 큰 부작용을 낳는지 잘 안다. 조급하고도 강압적으로 이루어지는 개혁작업이 눈에 보이는 작은 이익을 도모하다가 먼 장래의 더 큰 문제를 잉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에 문제인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문제 역시 의도적 선택의 메커니즘은 최소화하고 자생적 진화의 메커니즘을 최대한도로 이용하여 해결하는 것이 나올 것이다. 산업과 기업마다 바람직한 부채비율이 상이할 것임은 너무나 자명하며 얼마가 적절한지는 해당 기업과 그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기관이 가장 잘 알 것이다. 따라서 어떤 목표를 정해 획일적으로 모든 기업에 대해 그것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 가는 기업의 부채비율에 따라 대출금리를 차등화하는 것과 같은 가격 메커니즘을 활용함으로써 기업 스스로가 자신에 맞는 적정 채무구조를 찾아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나올 것이다.

6. 맺는 말

체제와 제도를 주어진 것으로 보고 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오직 분석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 것이지 체제나 제도가 경제분석의 대상이 될 수 없기에 그런 것은 아니다. 合理的인選擇을 강조하는 신고전학파의 最適化 理論이나 自生的인 進化의 과정을 통한 無爲自然的選擇을 중시하는 하이에크의 進化論的 體制選擇의 理論을 활용하여 체제와 제도를 선택하고 변형시켜 나가는 과정을 경제이론 체계 내에서 얼마든지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체제나 제도의 선택 그리고 체제나 제도의 변화과정에는 의도적 선택의 메커니즘과 자생적 진화의 메커니즘이 함께 작용한다. 일반적으로 보면, 국가를 새로 세우거나 혁명에 의해 새로운 레짐이 들어서는 경우에는 의도적 선택의 메커니즘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국가가 그대로 존속하며 레짐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는 자생적 진화의 메커니즘이 더 광범위하게 작동한다. 물론 어떤 메커니즘이 그 사회의 변혁을 가져오는 주장치인가 하는 것은 나라마다 다르다. 일반화하자면, 영미 계통의 국가에서는 자생적 진화의 메커니즘이 더 강하게 발휘되는 데 반해 독일 계통의 국가나 유교적 전통이 강한 동양에서는 의도적 선택의 메커니즘이 더 강하게 작동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의도적 선택의 메커니즘은 人間 理性을 중시하여 인간이 스스로 어떤 상태가 최적인지 알아낼 수 있으며 동시에 그런 상태로 현실을 끌어가기 위해 어떤 일을 하면 되는지 알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것은 당연히 目標 指向的이며 그 목표가 可視的이므로 새로운 체제의 선택이나 체제와 제도의 변화에 있어 분명한 終着點을 그려볼 수 있기 때문에 개혁을 선도하는 사람들이 매우 選好하는 메커니즘이다. 그러나 의도적 선택의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데에는 인간 이성이 완전무결하지 않아 지향하는 목표가 과연 최선의 것인지 잘

알 수 없거나 그 목표를 달성하려는 방안이 과연 올바른지 100% 확신할 수 없는 경우에 목표 지향적인 개혁의 과정이 인류를 자칫 破滅로 끌어갈 수도 있다는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 더욱이 목표의 달성에 급급한 나머지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과 방법에 강압과 폭력이 동원된다면 의도적 선택의 메커니즘이 낳는 부작용은 더욱 더 커지게 된다.

자생적 진화의 메커니즘은 수천만의 경제주체가 각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競技 參與者間에 建設的이고도 熾熱한 競爭이 이루어진다면 경쟁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그 사회에 適合하지 않은 제도나 체제는 자연히 淘汰되어 경쟁의 과정에서 살아남는 것이 바로 그 사회에 있어 가장 적합한 체제나 제도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전제로 한다. 이것은 처음부터 어떤 가시적인 목표를 내세우지 않으므로 과연 새로운 선택이 이루어지는지 바람직한 변화가 이루어지는지 분명하게 볼 수 없다는 단점을 지닌다. 자생적 진화의 메커니즘은 또한 오랜 기간을 거치는 동안 조금씩 바뀌는 변화가 쌓여 큰 변화를 가져 온다는 것을 강조하므로 단기간에 커다란 변화를 피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맞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커니즘은 그 성격상 자생적으로 최적 시스템을 찾아간다는 점에서 의도적 선택의 메커니즘에서 목표나 수단이 잘못되었을 때 인류가 입게 될 폐해를 수반하지 않는다는 장점을 지닌다.

우리 나라에서 이루어져온 체제나 제도 변혁의 과정을 회고해 보면 의도적 선택의 메커니즘이 강력한 힘을 발휘한 가운데 자생적 진화의 메커니즘은 별반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1980년대 후반 이후 정치와 경제의 민주화 진전에 따라 의도적 선택의 메커니즘이 후퇴하고 자생적 진화의 메커니즘이 조금씩이나마 자리를 잡아 가는 듯 보였으나 그나마 1997년의 경제위기를 계기로 하여 전면적인 의도적 선택의 메커니즘으로 회귀한 것이 현실이다. 자생적 진화의 메커니즘이 채 자리를 잡지 못한 우리 나라의 경제발전 역사와 위기상황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막 싹을 돋우려 하던 자생적 진화의 메커니즘이 퇴색하고 의도적 선택의 메커니즘이 전면에 등장한 것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세상이 아주 빠른 속도로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情報通信 技術의 革命的 發展과 國際化的 急激한 進展은 우리 나라조차도 이제 더 이상 의도적 선택의 메커니즘에만 의존할 수 없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의도적 선택의 메커니즘이란 한국적 현실에서는 命命에 依存하는 變革의 過程으로 귀결되기 마련인데 명령에 의한 변혁은 이제 더 이상 효과적이지 못한 세상이 된 것이다. 앞으로는 個性的이며 創意的인 多様な 經濟主體의 自生的이고도 自發的인 經濟活動만이 經濟發展의 原動力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체제와 제도를 선택하고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부터는 의도적 선택의 메

커니즘에 의존하는 일을 止揚하고 가능하면 자생적 진화의 메커니즘이 더 圓滑하게 作動하도록 그에 알맞는 環境을 造成하는 일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이 점은 정부가 행할 바람직한 경제적 역할이 무엇인가 논의하는 데 있어 중요한 시사를 제공한다.

서울大學校 經濟學部 教授

151-74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56-1

전화: (02)880-6476

팩시: (02)886-4231

E-mail: jisoona@snu.ac.kr